

직업병감시체계의 활성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송재철

직업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환자 개개인이 아닌 유해요인에 노출된 또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집단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하고, 이러한 사업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산업보건의 목표는 직업병의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이며, 직업병의 예방은 직업성질환 발생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직업병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모으는 감시(surveillance) 활동(또는 직업병감시체계)이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직업병감시체계란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직업성질환 발생자료를 모으고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감시체계의 결과물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용하여 중재(intervention)를 시행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평가에도 사용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직업성질환 발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특수건강진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승인 자료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진폐증이나 소음성난청 같은 무증상유소견의 직업성질환을 추적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거나 천식과 같은 무소견유증상의 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같이 임상증상이 앞서는 질환을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직업병 통계에 나타난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의 규모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직업병의 경우는 통계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직업병 환자의 산재승인 자료인데, 이 또한 보상 대상자들만의 자료라는 한계로 정확한 직업병의 현황을 반영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 직업병 예방사업은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러한 이유로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료환자 보고를 이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도 십여 년 전부터 직업성 천식과 암 감시체계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산재예방을 위한 보건학적 접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신뢰하지 않으며,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산재예방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료의 질을 높이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다양한 감시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국가기관 혹은 위탁 받은 대학기관이 전체 사업을 관리,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집되는 자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와 부처 간의 협조체계 부재로 인하여 공공정보 즉, 국민건강보험이나 사망자료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수집된 직업성질환 자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양질의 정보 생산이 불가능하다.

직업병감시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적으로, 질환별로 수행되고 있는 감시체계의 자료를 표준화하며 체계적인 수집, 분석, 해석하여 배포하는 중앙감시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중앙감시본부(가칭)를 설립하여 직업성질환 감시체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해야 하며, 정책개발과 개별 감시체계의 관리, 지원, 재원 조달, 정보제공 및 교육 분야에서 그 업무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각 부처의 공공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금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감시체계 운영이 중앙감시본부로서의 역할 강화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인 사업형태로 진행하게 된 것은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진 않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산업적 특성 분석에 따른 고위험군 등에 대한 다양한 감시체계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감시체계의 형태는 질병감시체계와 지역감시체계이다. 그러나 직종과 직업, 특정 집단을 포함하는 인구집단에 대한 감시체계는 직종별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발생 양상과 새로운 직업성질환의 발견에 필수적인 감시모델이며, 일부 직종은 사고 및 직업성질환에 특히 높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시체계를 통한 직업성질환 예방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건설업이나 광업,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직업성질환과 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감시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경우엔 혈액 전파성 병원균, 라텍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와 질병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부 유해요인에 높은 감수성을 보이기도 한다. 새로운 시도로서 전국의 의료기관의 생체시료를 이용한 실험실샘플분석을 통한 노출 감시나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국민영양조사’에 직업과 노동손실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도 매우 유용한 감시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자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양질의 산재자료를 확보한다면, 이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직업성질환의 발생양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산재승인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직업성질환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단순하여 기초적인 정보 외에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 때문에 산재보상 및 요양에 엄청난 비용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재승인신청 단계에서부터 해당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해발

생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직업성질환별 조사양식이 개발 보급되어야 하며, 보상이 인정되지 않은 자료도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선진 국가에서도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국가정보체계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나라이다. 이러한 장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계, 기업, 정부는 보물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신뢰성 있는 자료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 및 기업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이며, 근로자나 노동조합 역시 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나 경영계의 산재예방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